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
재일동포 입장에서

보고; 김영희

일본정부가 ‘민간기금에 의한 위토금’ 을 착착 추진하고 있는 현재 ‘기금’ 의 가동을 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입니다. 동시에 피해자 개인에 대한 사죄와 국가보상을 이루기 위한 힘을 어떻게 축적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제안도 곁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 ‘민간기금’ 을 가동시키지 않기 위하여】

벌써 결정은 했다고는 하나, ‘민간기금에 의한 위토금’ 으로 ‘위안부’ 문제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도 살얼음을 밟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금’ 에 돈이 모일지, 피해자들이 받을지, 또 현재 침묵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어떤 형태로 요구를 덧붙여올지도 모르는 등, 많은 불안거리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러한 일본정부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재일한국인 송신도씨를 비롯하여 한국이나 필리핀의 많은 피해자들이 ‘민간기금에 의한 위토금’ 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는 돈이 아니면 의미없다’ (송신도씨) ‘민간으로부터 모은 동정의 돈은 필요없다. 일본정부가 제대로 사죄하고 보상해주기를 원한다’ (이순덕씨) 등, 피해자들의 국가보상요구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간기금’ 진척상황으로 보면, 4월부터 반년간정도 돈을 모으고, 가을에는 피해자에게 급부할 것이 예상됩니다. ‘급부를 받는나 마느냐’ 라는 식의 양자택일의 제한적이고 왜곡된 선택을 피해자에게 직접 떠맡기지 않기 위해서도 현단계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기금’ 의 가동을 막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민간기금’ 의 발기인후보자들에게 ‘기금’ 의 기만성을 호소하고 ‘발기인이 되지 말라’ 고 압력을 가하건거나 (일본의 지원단체는 공개질문서 송부를 계획중) 기부금이 모이지 않도록 기업이나 노동조합에 파상공격을 가하는 것들입니다. 뒤에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지만, 침묵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사죄와 보상의 실현을 쟁취하기 위하여】

어제 보고에서도 있었듯이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 은 달혀진 일본국내의 조건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쟁범죄라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책임도 방기하고 은혜로서의 '위로금' 에 의한 결착은 일본국내에서는 통한다해도 개인보상을 실시해온 독일이나 미국, 캐나다의 전례를 상식으로 삼는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일본정부로 하여금 결정을 수정시키기 위해서는, 외교적 압력이나 국제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국내 '사정'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운동, '북경여성회의' 나 그 전단계의 '여성의 지위위원회' 에서의 로비활동, 또는 UN인권소위원회에서의 활동, 중재합의를 촉구하는 활동이나 ICJ 권고를 널리 알리는 운동등,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활동을 담보로 일본정부에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작년 한해 동안의 우여곡절을 겪어 분명히 드러난 것은, 전후보상실현을 약속한 村山(무라야마) 사회당위원장이 수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보상이 후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회당정권에 대해 환상은 가질 수 없다는 것, 또 외무관료의 논리와 벽이 그보다 더 높다는 것을 통감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관이 주도하는 역관계를 논리상으로도 무너뜨리고,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 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내에서 부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국간조약으로 해결됐다' '한도가 없어진다' '해당하는 국내법이 없으니 대응할 수 없다' 등 관료논리를 정면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하여, 그를 위해 보상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은 세삼 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미 다양한 운동이 시작되어 있을 줄 압니다. 여기서는 특히 재일동포 입장에서 보이는 점으로서, 한국정부를 움직이는 운동의 의의와 그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정부에 대한 행동】

아시다시피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전후보상문제는 모두 '양국간조약으로 해결됐다' 는 답변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일' 피

해자에 관해서는 양정부간에서 견해가 어긋납니다. 고陳石一, 石成基 씨등 '재일' 전쟁부상자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하여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재일한국인 전쟁부상자의 보상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협정의 해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일한국인 전쟁부상자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원호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1994년 1월 26일, 한국외무부의 답신).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을 놓고 양정부간에서 사실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구권협정 3조에서는 협정 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생겼을 경우의 중재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한국정부의 의지여하에 따라서는 이 점을 문제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이 체결시에 문제로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한변협은 한국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해 '한일협정의 내용에는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포함되지 않았고 전쟁범죄와 같은 형사책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간조약으로 해결됐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일본정부가 조일국교회복교섭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한일조약'에 있는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수정할 필요가 생길 것입니다. 즉 현재도 장래에도 한일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은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뿌리가 흔들리면 일본정부의 '해결됐다'는 주장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이라는 걸착을 외교상 문제가 생기면 수정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정부에게는 '말없는 한국정부'의 존재는 언제 불이 붙을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합의라도 본듯한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일까요? 행동네트워크가 일본외무성교섭을 했을 때, 외무성측은 '우리나라에서는 조약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해 왔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는 이의는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본정부의 답변을 듣는 한, 한국정부가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에 고사인을 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오해를 풀지 않고 계속 침묵한다면, 이것도 역시 역사에 후회를 남기게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정부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진행중인 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라고도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정부에 대하여, 아직도 진상규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일본정부가 김대통령의 '보상은 필요없다' 는 발언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 또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이 양정부간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점과 '제일동포' 상황을 알림으로써 '외교상의 압력' 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김대통령, 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고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광고 게재입니다. 한국동포들의 공감을 얻어, 피해국의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한국의 의원들에 대한 요청활동등을 통해서 한국정부가 일본외무성과 정부에 외교상의 압력을 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활동보고를 곁해서】

이어서 제일동포들의 활동과 메시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일한국인 전 '위안부' 송신도 씨 재판의 진척상황

송신도씨는 '제일의 위안부재판을 지원하는 회' 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작년 4월 5일 도쿄지방법원에 '사죄와 보상' 을 요구하며 제소했습니다. '청구의 취지' 에 보상금액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 온 것은 국가의 사죄 및 권리로서의 보상을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여섯번 구두변론이 행해졌지만, 1월 27일의 6차구두변론에서는 금액의 명시 없이는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1억2천만엔을 청구를 시도했습니다. 東条英樹 (도오조오 히데키) 등 A급전범이 만약 생존해 있었을 경우, 일본정부가 지급했으리라 상정되는 연금총액을 계산한 액수가 약 1억1천만엔입니다. 피해자의 청구액수가 가해자의 연금액수를 믿도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위토금' 의 금액이 백만엔이라고도 얘기되고 있는 현재,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었지만 (송씨가 입은 피해-몇번이나 강간당하고 성적 노예가 된 손해, 인신의 자유를 빼앗긴 손해,

전지에의 동행을 강요받아 생명을 위협받은 손해등-은 최저 767억5893만7500엔으로 시산되었다), 굳이 금액으로 제시하자면 1억2천만엔이 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거듭 국가의 사죄와 명예회복의 중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어성넷트워크의 활동

개개인의 활동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년에 4번씩 회보를 발간하고, 한달에 한번 열리는 정례회를 기본으로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팀을 짜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연극 '소리없는 만가' 상연이나 PCA에 관한 활동, 여자차별철폐에 대한 반박보고서 작성, 정대협 인터뷰기록집의 번역출판등을 해왔습니다. 학교교육의 부(副) 교재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을 만들기 위해 회원 5명이 "더 알고 싶은 위안부문제" 를 지난 1월에 발행하였습니다.

* '세계각국의 신문에 의견광고를!' 전후보상실현국제캠페인의 활동

국가책임을 얼버무리는 '민간기금' 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일본을 비롯 피해자를 안고 있는 아시아각지역, 그리고 세계의 신문에 '의견광고' 를 게재함으로써 널리 알리는 활동이,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까지 毎日(마이니치) 신문, 동아일보, 뉴욕타임즈에 게재하여 한국으로부터 58통,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쿠폰(무리아미수상에 대한 요청목적)이 돌아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약 3개월 동안에 170개 단체 1370명의 찬동을 얻었습니다. 3월 1일에는 필리핀의 데일리 인콰이어터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제일한국민주여성회의 활동과 메시지

차별없는 사회,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래로, 東京(도쿄), 大阪(오오사카), 東海(도오카이) 를 거점으로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월 1회의 정례회를 기본으로 하여, 기관지발행, 자료집발간등을 해왔습니다. 90년 이후부터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 전후보상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모임에서의 강연, 학습회활동을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켜 왔습니다. 또 '그대, 조선의 십자가여' 를 번역 출판함으로써 각지에서 이 낭독극, 연주회등이 열려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넓혀졌습니다.

우리는 전후보상문제를 조국통일과 분단극복의 관점에서 운동해 왔습니다. 조국분단과 남북대립이 전후보상문제의 해결을 늦추고, 남북의 여성들이 손잡는 것을 막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3차아시아연대회의에 정치의 벽을 깨어 처음으로 북측으로부터의 참가가 실현되었고, 동시에 우리도 대표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해방50년인 올해가 더욱 역사적인 한해가 될 것을 여기게 하고 있어, 더욱 새로운 결의로 임하게 됩니다.

*大阪 (오오사카)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회' 메시지

회원 9명은 관서(關西) 지방에 거주하는 재일 2세. 93년에는 콘돔 '돌격일번' (突撃一番) 재생산사건에 대한 항의활동, 한국의 연극 '소리없는 만가' 일본공연을 전국 13군데서 실현시켰습니다. 현재, 짚은이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종군위안부문제학습비디오' 를 제작중입니다. 비디오는 2부 구성으로, 역사편으로는 '위안부' 정책의 사실과정을, 현대편에서는 전후보상문제, 재일한국인문제, 여성문제로부터 이 문제를 검증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족문제, 보상문제인 동시에 기지매춘이나 아시아각지에서 일본에 온 여성에 대한 강제매춘, 강간등 현존하는 성폭력사회를 근절하지 않는 한, '위안부' 문제는 재생산되는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본국, 일본, 세계의 여성운동과 연대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운동을 모색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국내의 운동과 국제적인 압력을 연결하여 운동의 네트워크를 더욱 넓히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실현해갑시다. '전후50년' 을 맞이한 올해를 문제해결을 향한 확실한 한걸음의 해로 하기 위하여 함께 전진합시다.